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

## 1주제

#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합리화 방향

2025. 8. 20

미래산업정책연구실

김 화 랑 부연구위원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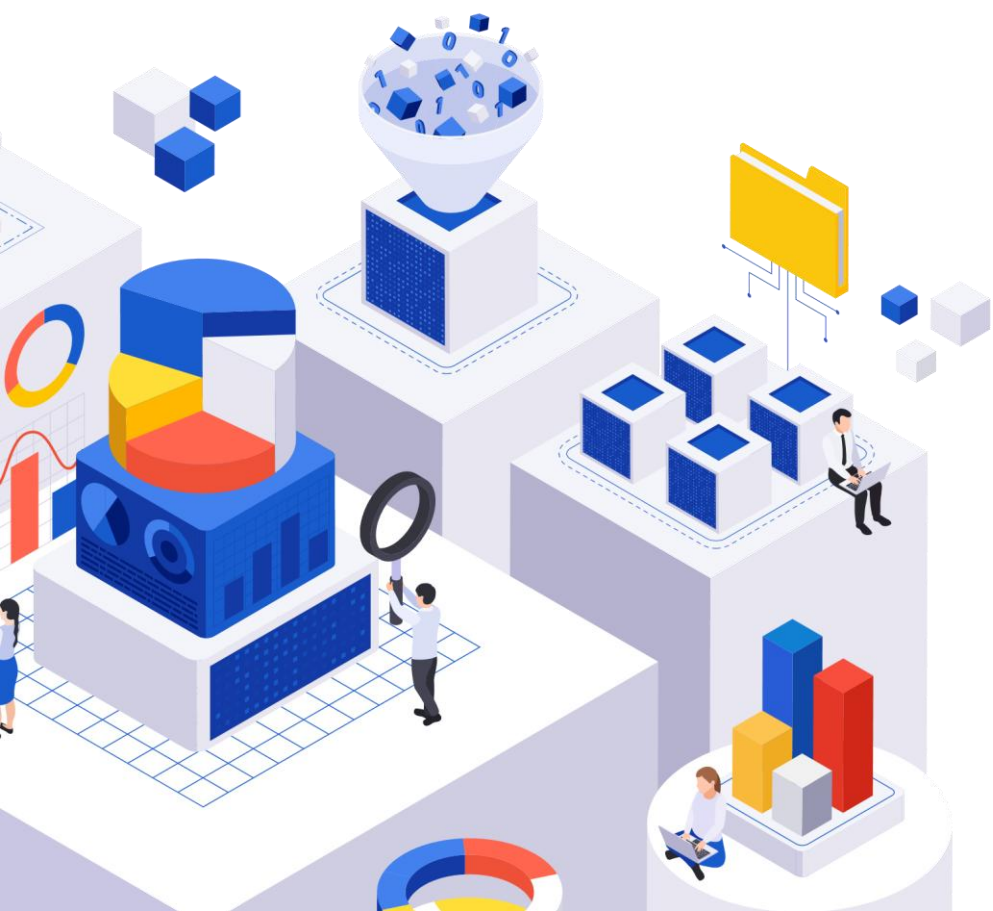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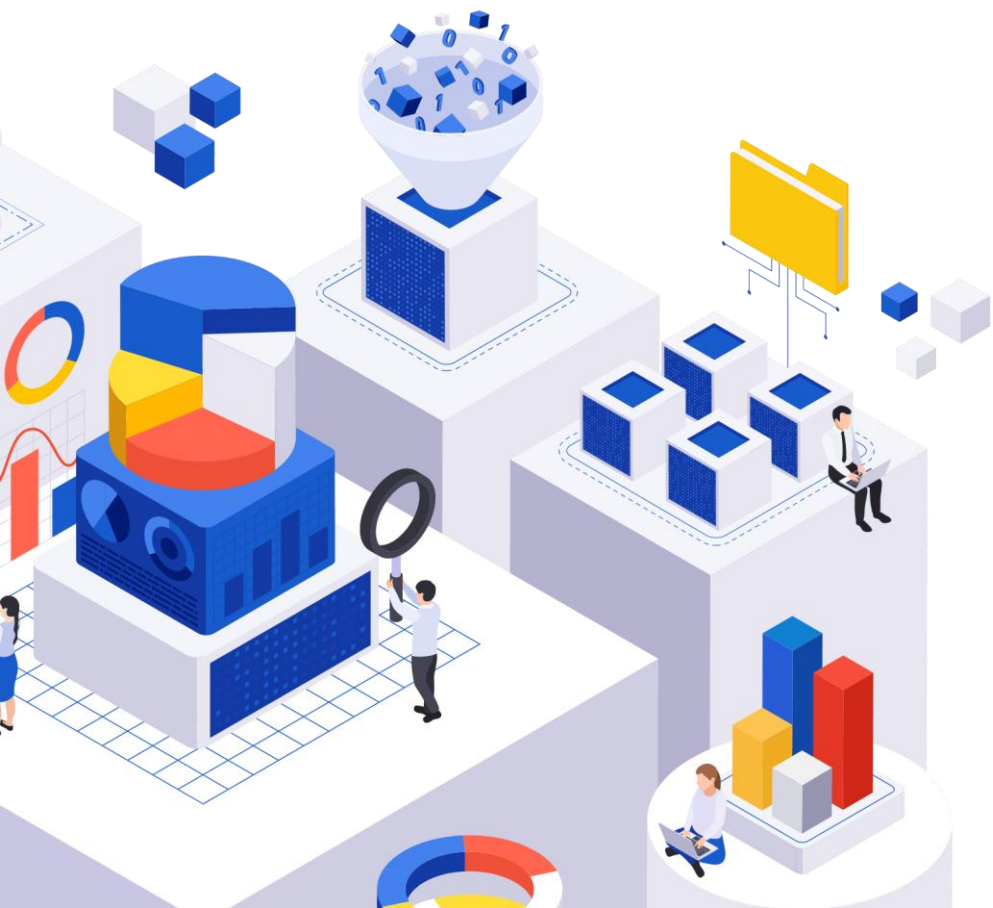
1 들어가며...

2 규제의 요람(搖籃)으로 일컬어지는 건설산업

3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한계

4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의 미래 로드맵





1

## 들어가며...

- ① 10년간 심화된 기업 규제, 올해 더욱 악화 전망
- ② 현 정부, 출범 이후 불필요한 규제 전면 정비 착수

# 10년간 심화된 기업 규제, 올해 더욱 악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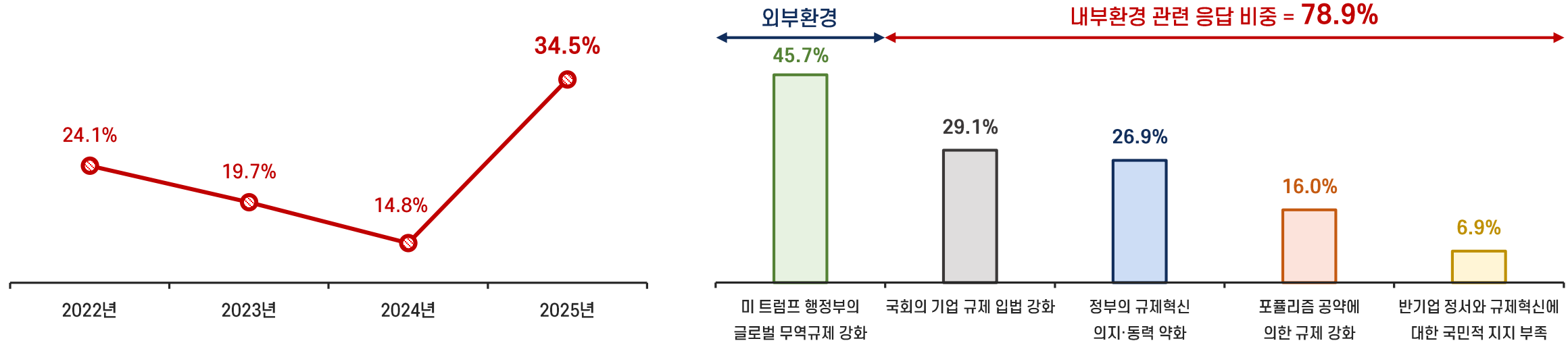
## 그간 규제 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제 부담은 악화 → 올해 규제 환경 더욱 ‘악화’ 전망

### 기업부담지수(BBI) 비교: 2015년 vs 2025년

구분	전체	조세 부담	준조세 부담	규제부담					일선 행정부담
				전체	입지	입지·건축	환경	노동	
2015년	110	121	123	88	69	82	96	105	77
2025년	106	101	113	103	101	99	99	112	111
변동	▼4	▼20	▼10	▲15	▲32	▲17	▲3	▲7	▲34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25.4.17),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 온라인 좌담회

### 지난 4년간 기업규제 환경 ‘악화’ 인식 추이와 올해 규제 환경 악화 전망 주요 요인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2025.3.6),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주: 복수응답, 각 항목의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 올해 기업규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175개社)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현 정부, 출범 이후 불필요한 규제 전면 정비 착수



## ○ 행정 편의·불필요 규제 과감히 해소, 창의적 기업 활동은 신속한 규제 합리화로 지원



###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의 규제 개선 활동 계획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7.30), “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합리화 TF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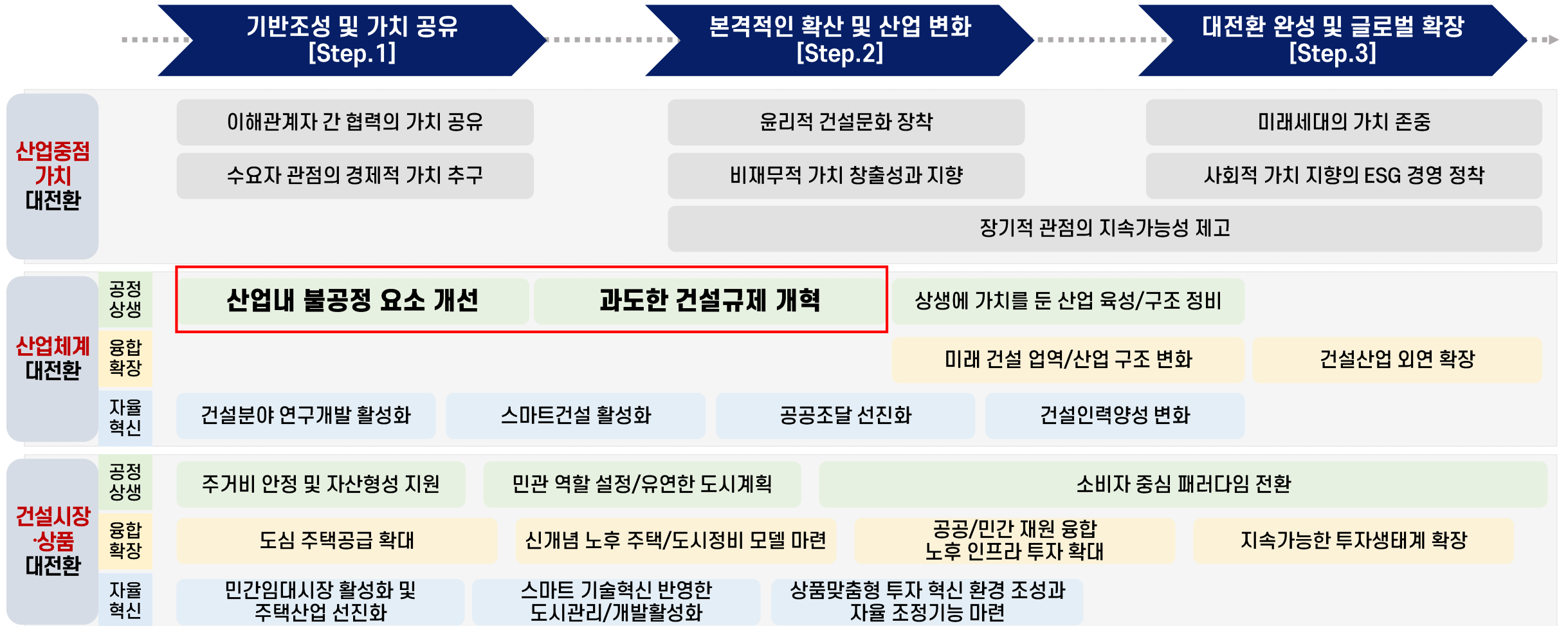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조달청 (2025.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달기업 의견을 반영해 <b>규제를 개선</b>하고, <b>네거티브 규제</b>로 전환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추진</li> <li>약 760개의 조달 규정을 Zero-Base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 → 100여개 조문을 <b>폐지 및 완화</b>하고, 50여개의 <b>핵심 규제</b>를 <b>신속 개선</b></li> </ul>
관계부처합동 (202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도한 경제형벌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법무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15개 부처·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구성</li> <li>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b>형사 책임 완화</b>,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과도한 형벌 규정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b>형벌 규정 합리화 추진</b></li> </ul>
기획재정부 (2025.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전략 TF」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b>기업 부담 완화</b>와 <b>규제개선 의견 수렴</b> 및 공론화 플랫폼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li> <li>기업, 경제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b>‘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AI·데이터 등 신 산업 패키지 육성 방안’</b> 추진</li> </ul>

자료 : 조달청 보도자료(2025.7.10),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 주요제도 80개 규제 리셋”;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8.1), “경제형벌 합리화 TF 본격 가동 전 부처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8.5),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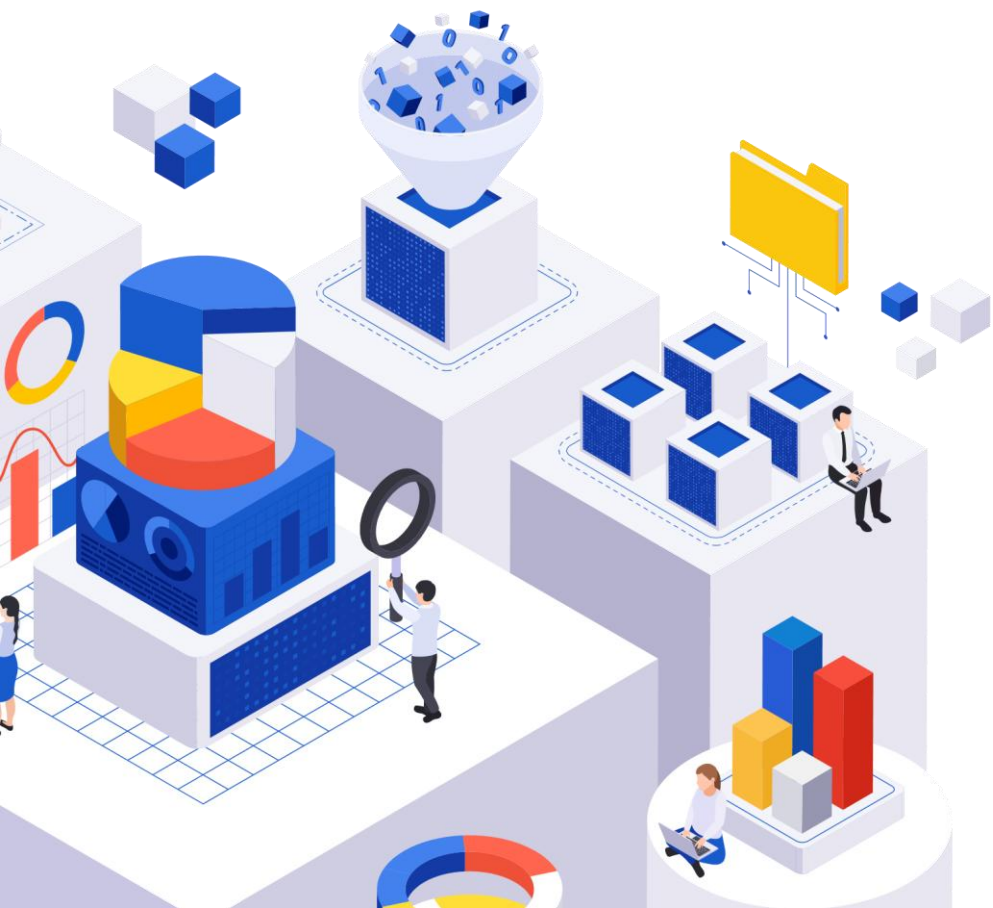
# [참고]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중장기 로드맵



## ○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세부과제(안)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5.3.18),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제언”, 2025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혁신 전략 세미나



## 2

## 규제의 요람(搖籃)으로 일컬어지는 건설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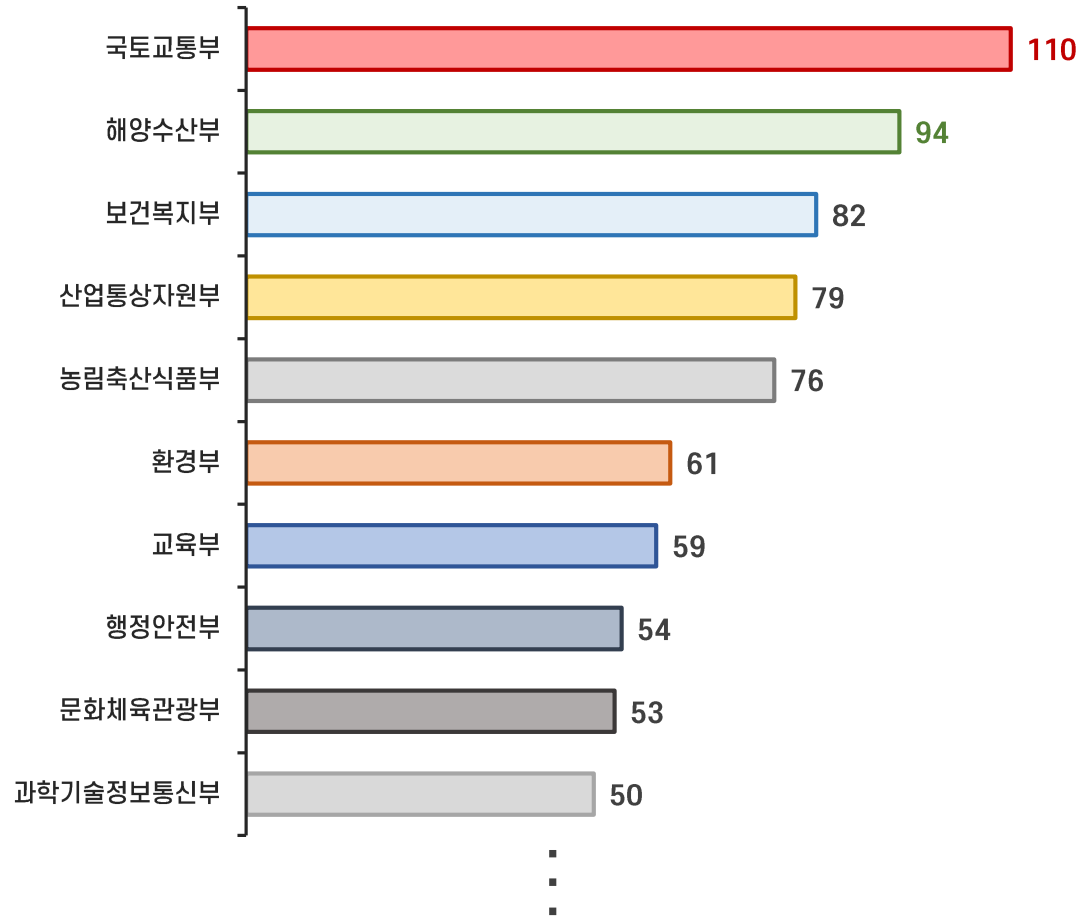
- ① 정부 부처 中 규제 법률 최다 보유 부처
- ② 국토부 소관 규제 법령, 규제 조문 수 상위 10대 현황
- ③ 건설사업 관련 법령 인당 관리 규제 수 비교
- ④ 국토부 외에도...다양한 부처가 건설산업 규율
- ⑤ 건설사업 규제, 다양한 법령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
- ⑥ 규제의 역기능: 사업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 ⑦ 산업 규제의 경제적 비용 영향 분석

# 정부 부처 中 규제 법률 최다 보유 부처



○ 총 45개 중앙부처 소관 규제 법률 총 1,157건, 이 중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법률 전체의 9.5% 차지(1위)

## 규제법률이 가장 많은 10대 중앙부처 현황



##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법률에 대한 소관 분야별 규제 조문 수 현황

**[1차관 소관] - 기획조정·국토도시·주택토지·건설정책**

- 전체 규제의 **51.6%**를 차지하며, **시행령** 비중이 가장 높음(1,340건, 33%)
- **제도 및 절차적 규정**을 중심으로, 법률의 세부 시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

**[2차관 소관] - 교통물류·항공정책·모빌리티자동차·도로·철도**

- 전체 규제의 **47.4%**를 차지하며, **행정규칙** 비중이 가장 높음(1,469건, 39%)
- **현장 운영 및 내부 지침**을 중심으로 기술·안전 관리 분야에 세부 지시사항이 다수 포함

구분	규제 법률 수	규제 조문 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합계
총 계	110	1,894	1,834	1,881	2,268	7,877
1차관 소관	58	1,137	1,340	790	797	4,064
2차관 소관	45	719	471	1,077	1,469	3,736
별도조직	5	31	20	11	2	64
소속기관	2	7	3	3	0	13

자료 : 규제정보포털(2025.8.8), “규제현황(중앙부처)”

자료 : 규제정보포털(2025.8.5), “규제현황(국토교통부)”  
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조문의 수를 합산 후 담당 실·국 별 분류

# 국토부 소관 규제 법령, 규제 조문 수 상위 10대 현황



## 국토교통부 규제, 세부·현장 중심부터 절차·기준까지...다층·중복 구조로 규제 강도 최상위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법률 조문 수 비교: 상위 10대 법률 중심

구분	법률명	규제 조문 수				총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1	항공안전법	54	3	65	626	748
2	철도안전법	38	40	259	216	553
3	건축법	67	176	73	155	471
4	자동차관리법	76	41	225	65	407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3	57	171	79	380
6	주택법	48	119	90	103	360
7	공항시설법	34	17	50	178	279
8	건설기술진흥법	34	84	66	66	250
9	건설기계관리법	36	21	148	25	230
10	국토계획법	37	70	8	41	156
13	건설산업기본법	59	41	14	31	145
43	건축사법	24	12	6	5	47

자료 : 규제정보포털(2025.8.5), “규제현황(국토교통부)”

교통·건설 규제, ‘현장형 vs 제도형’ 두 축으로 구조화

### [<sup>①</sup>규제 조문 집중도와 규제 강도]

- 『항공안전법』은 총 748조문으로 구성, 행정규칙이 626조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항공 분야의 안전관리가 **세부·현장 중심 규제**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
- 『철도안전법』(553조)은 시행규칙 비중(259조)이 높음 → **현장 운영 절차**와 **기술 규격 중심**의 세밀한 규제가 많음을 의미

### [<sup>②</sup>건설 분야 법률의 다층 규제 구조]

- 『건축법』은 총 471조문으로 시행령(176조)과 시행규칙(73조)이 비교적 많아, **건설 절차와 기준이 다단계로 규제**되고 있음을 의미
- 건설산업 전반이 법령·시행령·규칙·행정규칙의 복합 규제 체계로 구성 → 특히, **각 법률 간 상호 연계가 많아 중복 규제 가능성** 존재

### [<sup>③</sup>규제 유형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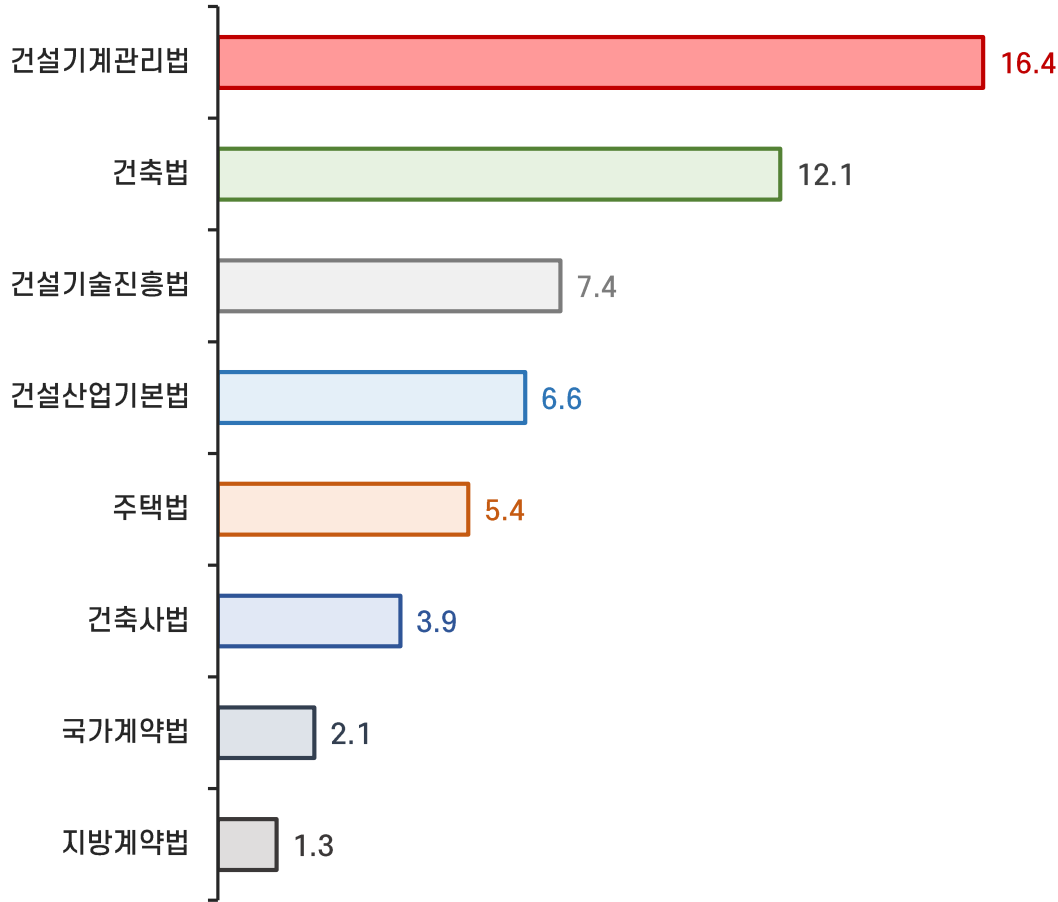
- (행정규칙 多)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 **현장 적용성** 중시, **기술·운영적** 사항
- (법률·시행령 多) 자동차관리법, 건축법 → **제도적 틀**과 **절차 중심**의 규제
- (시행규칙 多) 철도안전법, 건설기계관리법 → **세부절차**와 **기술 기준** 중심

# 건설사업 관련 법령 인당 관리 규제 수 비교



## 규제 법령 최다 부처 국토부...공무원 1인당 관리 규제 수, 최대 13배 격차

주요 건설·계약 관련 법률의 소관부서별 인당 규제 건수 현황



자료 : 규제정보포털(2025.8.8), “규제현황(중앙부처)”

주요 건설·계약 법률 소관 부서별 현황 및 총인원, 1인당 규제 수

구분	법률 명	규제조문 수	소관부서	총인원	인당 규제 수
국토 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230	건설산업과	14	16.4
	건축법	471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과, 녹색건축과	39	12.1
	건설기술진흥법	250	기술정책과, 건설안전과, 기술기준과	34	7.4
	건설산업기본법	145	건설정책과, 건설현장준법감시팀	22	6.6
	주택법	360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기금과, 주택정비과, 주택정책과	67	5.4
	건축사법	47	건축문화경관과	12	3.9
기획 재정부	국가계약법	56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달청), 계약정책과	27	2.1
행정 안전부	지방계약법	24	회계계약제도과	1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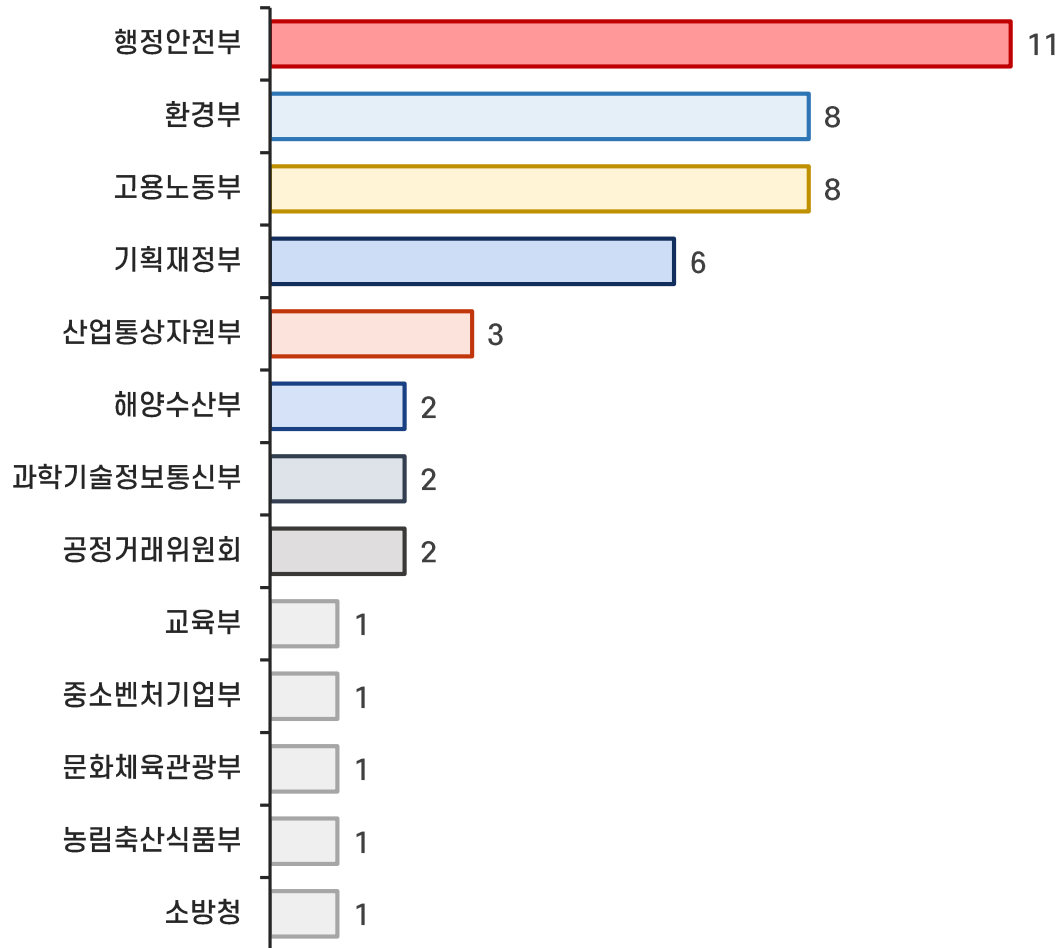
자료 : 규제정보포털(2025.8.8), “규제현황(중앙부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2025.8.10), “부처별 조직 인원 현황  
주: 건설사업 직접 관련 법률에 ‘하도급(규제조문 수: 52건)’법도 포함되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상 관련 정보를 미 제공함에 따라 제외

## 국토부 외에도... 다양한 부처가 건설산업 규율



## 국토교통부 제외 건설 관련 중앙부처 규제법률 47건...규제 조문 4,656개 달해

### 중앙정부 부처별 건설 관련 규제법률 수 현황



### 건설 규제법률, 부처별 현황 비교

소관부처	법률 명	규제조문 수
행정안전부	①지방계약법, ②지방재정법, ③지방공기업법, ④행정대집행법, ⑤행정규제기본법, ⑥온천법, ⑦자연재해대책법, ⑧농어촌도로 정비법, ⑨소방시설공사업법, ⑩지진·화산재해대책법, ⑪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67
환경부	①환경정책기본법, ②환경영향평가법, ③폐기물관리법, ④소음진동관리법, ⑤지하수법, ⑥하천법, ⑦담건설관법, ⑧폐기물시설촉진법	883
고용노동부	①근로기준법, ②고용정책기본법, ③국가기술자격법, ④산업안전보건법, ⑤중대재해처벌법, ⑥산재보험법, ⑦건설근로자법, ⑧외국인고용법	1,835
기획재정부	①국가계약법, ②민간투자법, ③조달사업법, ④전자조달법, ⑤공공기관운영법, ⑥정부기업예산법	100
산업통상자원부	①엔지니어링산업법, ②전기공사법, ③전력기술관리법	126
해양수산부	①신항만건설법, ②항만법	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정보통신공사법, ②기술사법	172
공정거래위원회	①하도급법, ②공정거래법	264
교육부	①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1
중소벤처기업부	①판로지원법	41
문화체육관광부	①체육시설법	67
농림축산식품부	①농어촌정비법	108
소방청	①소방시설법	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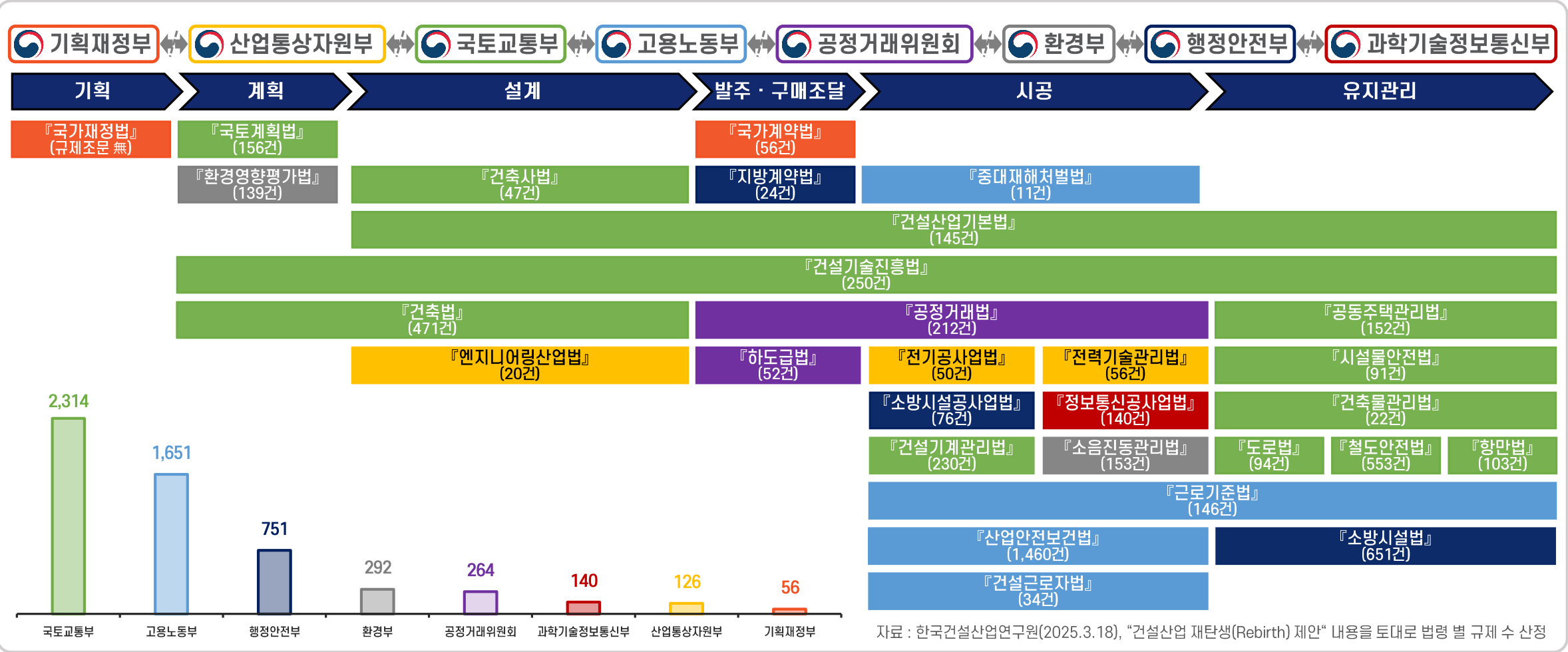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건설연구원(2023), “건설공사 계약관리 실무 가이드” 자료를 토대로 규제 조문 수 확인 및 재 작성

# 건설사업 규제, 다양한 법령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



○ 건설사업에 총 29개 법령 적용...『국가재정법』 제외 규제 조문만 5,594개

## 건설사업 관련 법·제도 및 부처



# 규제의 역기능: 사업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 ○ 규제, 필요성은 분명하나 과도하면 산업 동력 상실로 연결

### 국내 건설현장에서의 규제 관련 주요 애로사항

구분	지연 기간 / 영향	비용 증가 추정	주요 규제 요인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	계획 6.5년 → 실제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5차 심의 등)	금융비·자재비 수백억 원 증가	환경영향평가 반복 심의, 다기관 인허가 지연(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서울 A구 재개발 정비사업	건축심의 이후 추가 조건 부과로 승인 2회 반려, 1년 이상 지연	PF 금융비 수십억 원 증가, 분양가 상승	지자체 간 심의 충돌·재심의 관행
수도권 민간아파트 신축현장	주 52시간제 적용 이후 동일 공정(타설)기간 20~25% 증가	추가 인건비·장비 대기비 월 수천만 원	노동시간 제한, 야간·휴일 작업 제약
C사 도심 복합건물 공사	야간 콘크리트 타설 제한(소음·진동 규제) 으로 공기 약 2개월 연장	장비 대기·재작업 비용 약 5억 원	소음·진동관리법·지자체 야간작업 제한
영남권 중건건설사 토목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조치 확대, 공정 보수화로 착공 지연 3개월	안전설비·교육·법률 자문비 등 수억 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친환경 공공청사 신축사업	녹색건축 인증·탄소배출 보고 절차로 설계·자재 변경 4회	친환경 자재·인증비 수억 원	탄소중립·녹색건축물 의무화

자료 : 국토부·환경부 인허가 자료, 제주도 보도자료(2023);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사전 사례집(20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태조사(2022), 서울시 환경정책과 고시, 현장 인터뷰(2023), 고용노동부 판례 분석,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2023), 국토부·환경부 탄소중립 로드맵(2023)

## 산업 규제의 경제적 비용 영향 분석



## ○ 안전·환경·노동·품질 전방위 규제 강화...건설업 비용 압박 가중

### 주요 산업별 규제비용: 2013년 vs 2023년 추정 결과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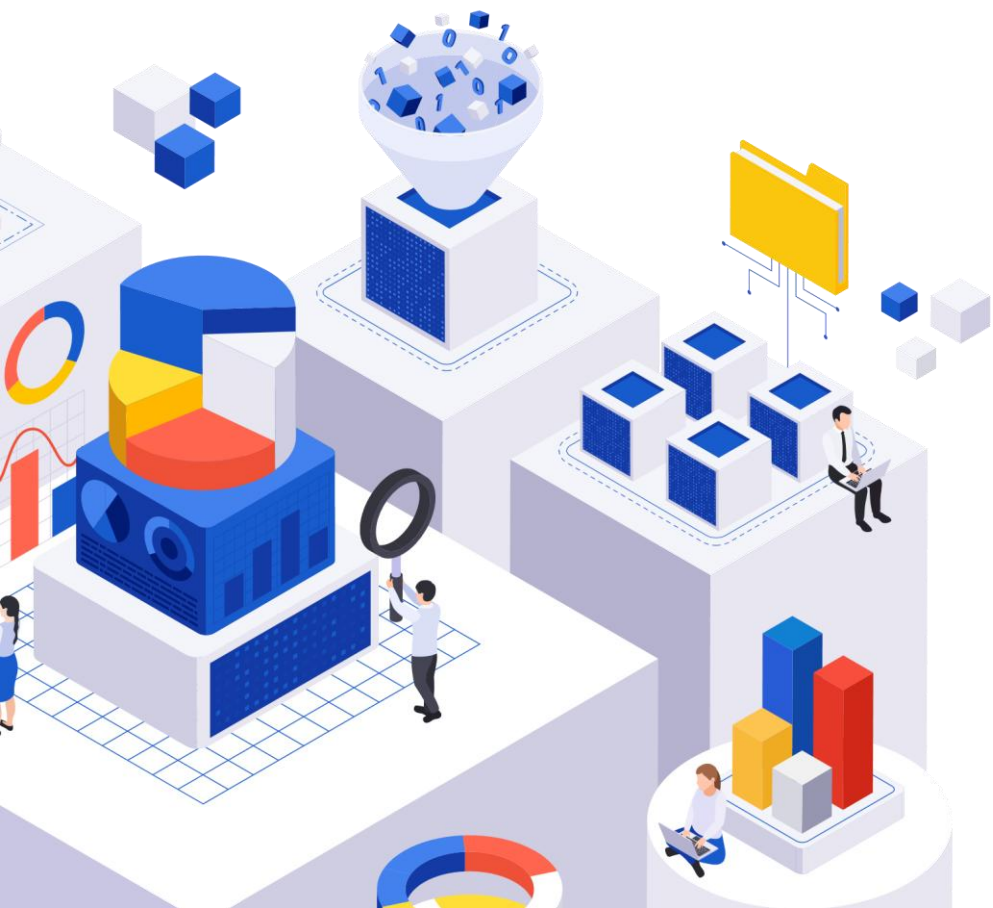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23년
농림어업	3.6	4.0
광업	0.3	0.5
제조업	49.2	61.7
전기·가스·수도	2.7	3.8
폐수처리·자원재활용	1.0	1.3
<b>건설업</b>	<b>7.9</b>	<b>11.4</b>
서비스업	93.6	140.9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2015.4),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추정"

주: 본 표의 2023년 산업별 규제비용은 KIET(2024) 추정치인 총규제비용 377조 원을 기준 값으로 두고, KOSIS의 최신연도 산업별 명목 부가가치 구성비(%)를 적용하여 FKI 방식(총규제비용 × 산업 구성비)으로 산정 및 추정

### 건설업 규제비용 증가 주요 요인

안전규제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li> <li>• 안전관리 조직 신설·전담 인력 채용 비용 증가, 안전시설·장비투자 확대·법률자문,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 교육훈련 비용 증가 등</li> </ul>
환경규제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건설현장 온실가스 배출관리 의무 강화,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대</li> <li>• 친환경 자재 사용 비용 증가, 에너지 성능평가·인증 관련 설계·검토비 상승 등</li> </ul>
인허가및 심의절차복잡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안전영향평가 등 다중 심의·중복 절차 지속</li> <li>• 착공 전 행정소요 기간 장기화 → 금융비용 증가, 재심의·재설계로 인한 간접비 증가</li> </ul>
품질·안전관리 기준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미콘·철근 품질검사 강화, 시공기록 의무화, 공공공사 하도급 관리 규정강화</li> <li>• 검사·시험비용 증가, 디지털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발생 등</li> </ul>



### 3

## 건설산업 규제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한계

- ① 국토부, 건설 분야 규제 합리화 정책 추진...성과 가시화
- ② 하지만, 규제 합리화 성과에도 산업 현장 체감은 미흡
- ③ 국토부, 규제조문에 대한 점검 시행
- ④ 규제합리화 기조와 엇갈린 건설입법 흐름

## [참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건설업계, 규제개혁 체감도 거의 '제로'



# 국토부, 건설 분야 규제 합리화 정책 추진...성과 가시화



## 국토부 규제합리화 성과, 중앙부처 중 4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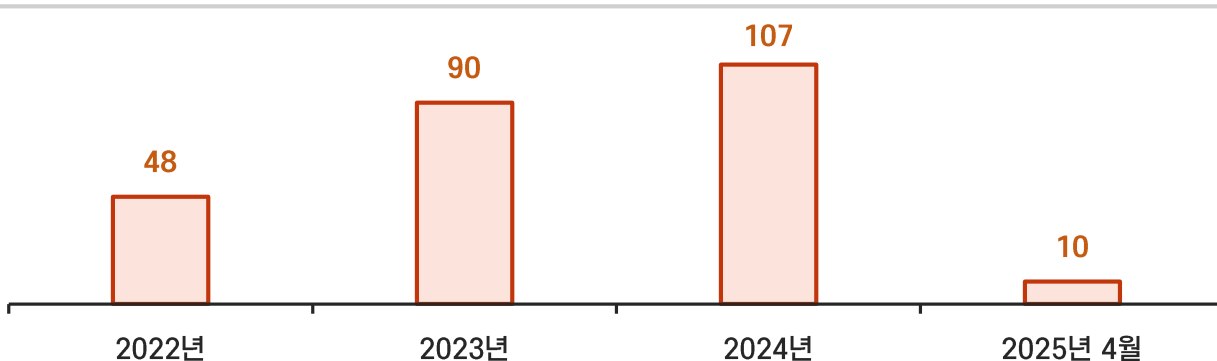
2022년 7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구분	주요 내용
추진 배경	“규제 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국토부 장관 의견 반영
구성	①도시분과, ②건축분과, ③주택·토지분과, ④모빌리티·물류분과, ⑤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 - (분과 별 7인, 총 35명)
기능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 및 기존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의결
설립 근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2022년 이후 연도별 규제합리화 건수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7.6), “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을 민간위에 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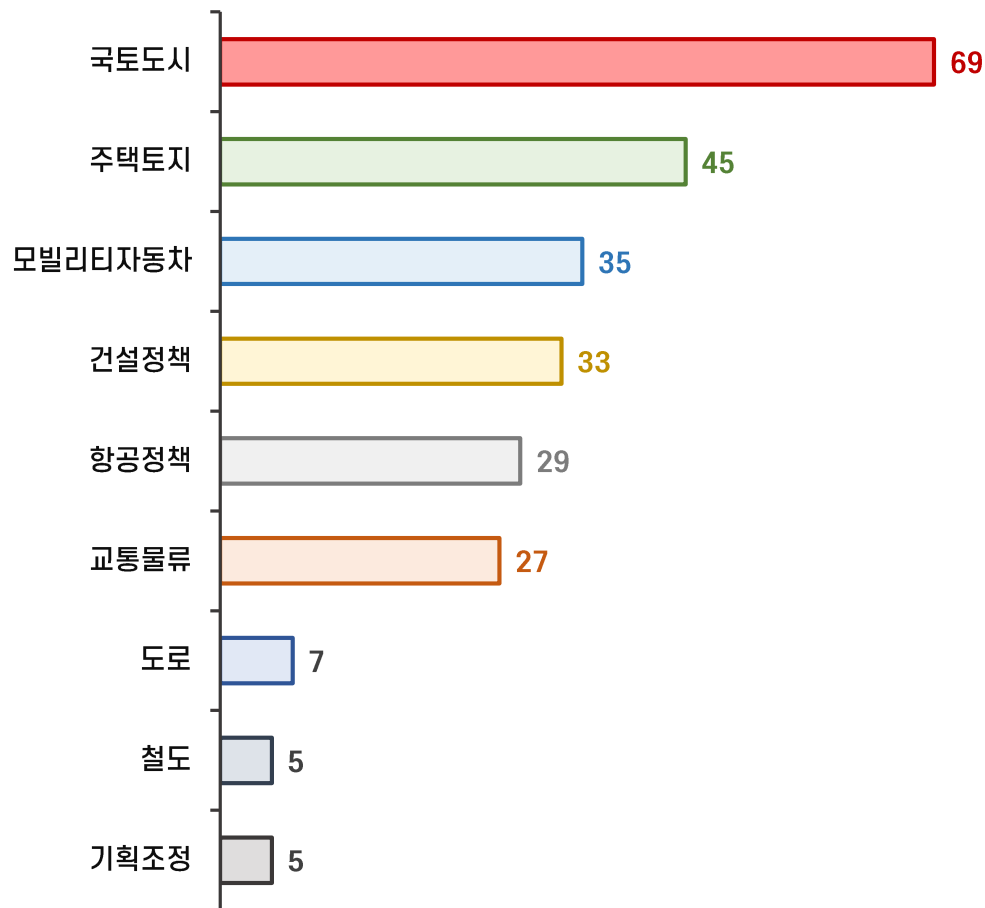
“2022년 이후 45개 중앙부처의 규제합리화 실적 3,756건 중 255건(6.8%)으로, 전체 4위 기록”

# 하지만, 규제 합리화 성과에도 산업 현장 체감은 미흡



## ○ 규제합리화 성과 255건 중 건설정책 33건...부담경과 성과 비중은 6.3%로 저조

■ 규제합리화 추진실적 실·국 별 분류('22.4 ~ 현재)



자료 : 규제정보포털(2025.8.5), “홍보마당(부처별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규제합리화 추진현황)”  
주: 2022년 4월 부터 현재까지 규제합리화 추진 실적 공개

■ 규제합리화 추진실적의 실·국 및 분야별 분류 결과

구분		국민생활	부담경감	신 산업	중소기업	투자·일자리	총 계
1차관 소관	건설정책	5	16	2	2	8	33
	국토도시	6	19	8	2	34	69
	기획조정	1	2	-	1	1	5
	주택토지	20	14	1	1	9	45
2차관 소관	교통물류	3	10	4	5	5	27
	도로	2	1	1	-	3	7
	모빌리티 자동차	7	14	8	4	2	35
	철도	1	1	-	1	2	5
	항공정책	2	9	10	3	5	29
합 계		47	86	34	19	69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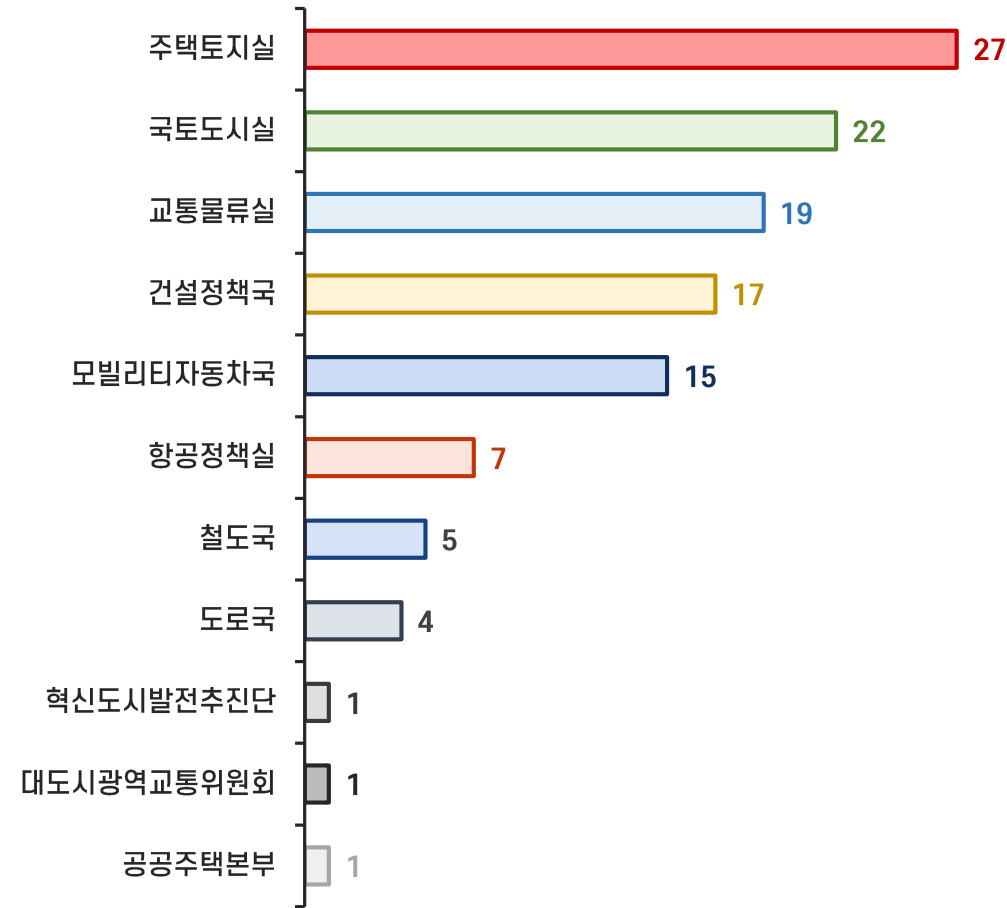
자료 : 규제정보포털(2025.8.5), “홍보마당(부처별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규제합리화 추진현황)”  
주: 규제합리화 개선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실·국 별 주요 업무와 소관 법령을 기준으로 재 분류

# 국토부, 규제조문에 대한 점검 시행



## ○ 규제 재검토 법령 119건...산업 변화 반영 장치 마련됐으나 개선 실태 확인은 어려움

### ■ 실·국 별 규제 재검토 대상 법령 현황



### ■ 건설정책국 소관 법령 중 ‘규제 재검토’ 대상 주요 내용 현황

구분	법률명	조문 (규제의 재검토)	주요내용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5	검사대행자에 대한 처분기준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9조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의 종류·시간·내용 및 면제의 기준 외 2건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의3	건설업의 등록기준,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부당특약의 유형 등 외 3건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외 5건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외 1건
7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0조의3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
8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9조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범위,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
1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 외 3건

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규제의 재검토’를 검색한 후,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건수를 집계하고 이를 실·국별로 분류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2025.8.12),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 [참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명시 등에도 불구하고 현행화 안돼...



## ○ 행정규칙,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

###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시행 2008. 9. 24] [국토해양부훈령 제156호, 2008. 9. 24, 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화 대책안 마련
2. 선진화 대책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건설산업 선진화 실천계획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건설산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며,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사업관리 및 건설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 정부위원은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소관 담당업무의 과장 및 사무관이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본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되며, 각 분과에는 분과위원장을 둔다.

⑤ 분과위원회는 마스터플랜 분과, 발주제도 분과, 업종·업역 분과, 보증제도 분과, 설계·엔지니어링 분과, 공공사업 효율화 분과, 투명화 분과 등 7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09년 2월로 하되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연장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특정업계를 대변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분과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해당 위원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안 등 중요사항을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차관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시행 2020. 8.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9호, 2020. 8.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0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업의 공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도급계약"이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수급인(업종을 불문한다)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정한 조직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주계약자"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등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공동도급의 유형)**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 :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 :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 :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및 구성원의 수, 최소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하여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시행 2015. 8. 20] [국토교통부훈령 제576호, 2015. 8.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관리 및 조정의 내용)** ①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정 및 관리란 건설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사현장에 현장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용품을 비치하고 있을 것
2.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및 시공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공사현장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목에 따른 인력을 현장에 상주 또는 적정히 배치하고 있을 것. 현장관리 인원 및 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령이 당해 업체에 고용된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가.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사인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한 공사현장관리인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품질관리자
-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마. 건설공사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함께 발주된 경우로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수행시에는 전기공사법 제17조, 정보통신공사법 제33조, 소방시설공사법 제12조에 의한 자
4.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비산먼지·소음·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시행할 것

가. 공사현장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현장상황조사 예시 : 전력·통신간선시설, 급수간선시설, 도시가스 배관, 배수관 및 암거의 급격·위치등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상황, 진입도로현황,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등 지역편의시설, 지반·지질상태, 인근하천의 유수상태 등

※ 대책수립사항 예시 : 인근가옥 및 가축등의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낙진, 먼지 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우기중 배수 대책 등

나. 공사현장의 가시시설물의 설치계획표를 작성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것

※ 가시시설물 예시 : 공사용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자체의작장, 공사용전력·용수·전화, 세면장·배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등

5. 공사전체에 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 시공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현장조직표(하수급인까지 포함) 작성
- 나. 공사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선임계의 제출, 각종 관리계획 수립 등 공무활동의 총괄수행
- 다. 공사전체에 관한 공정계획 수립, 세부공정(년, 분기, 월, 주, 일단위)계획 작성, 현장상황변화에 따른 공정제검토 및 조정 등 공정관리업무 수행

### <중 략>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76호, 2015. 8.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미 존속기간이 **오래전에 만료**되었는데도  
'현행행정규칙' 검색 결과에 노출

상위 법령인 『지방계약법』에 '혼합방식'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내용이 행정규칙에는 **미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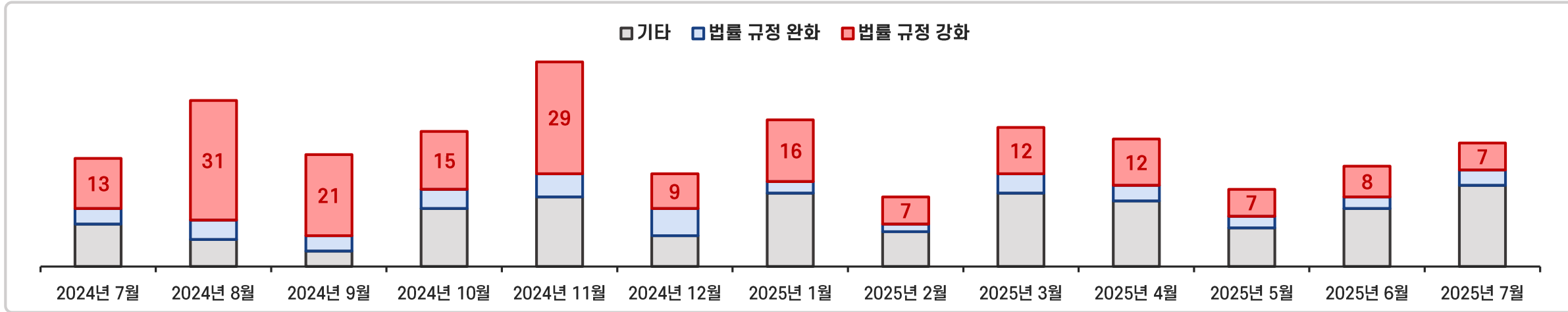
'재검토기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로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음**

## 규제 합리화 기조와 엇갈린 건설입법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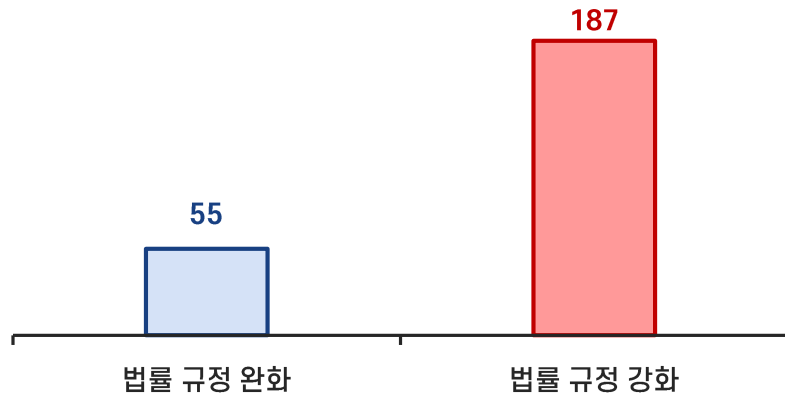
### ○ 건설산업 법률안, 완화보다 강화...업계 규제 부담 가중

#### |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관련 주요 법률 입법 동향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4.7 ~ 2025.8), “동향브리핑(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

주: 해당 자료에 제시된 주요 관련 법률의 제안 방향과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규정 강화, 규정완화,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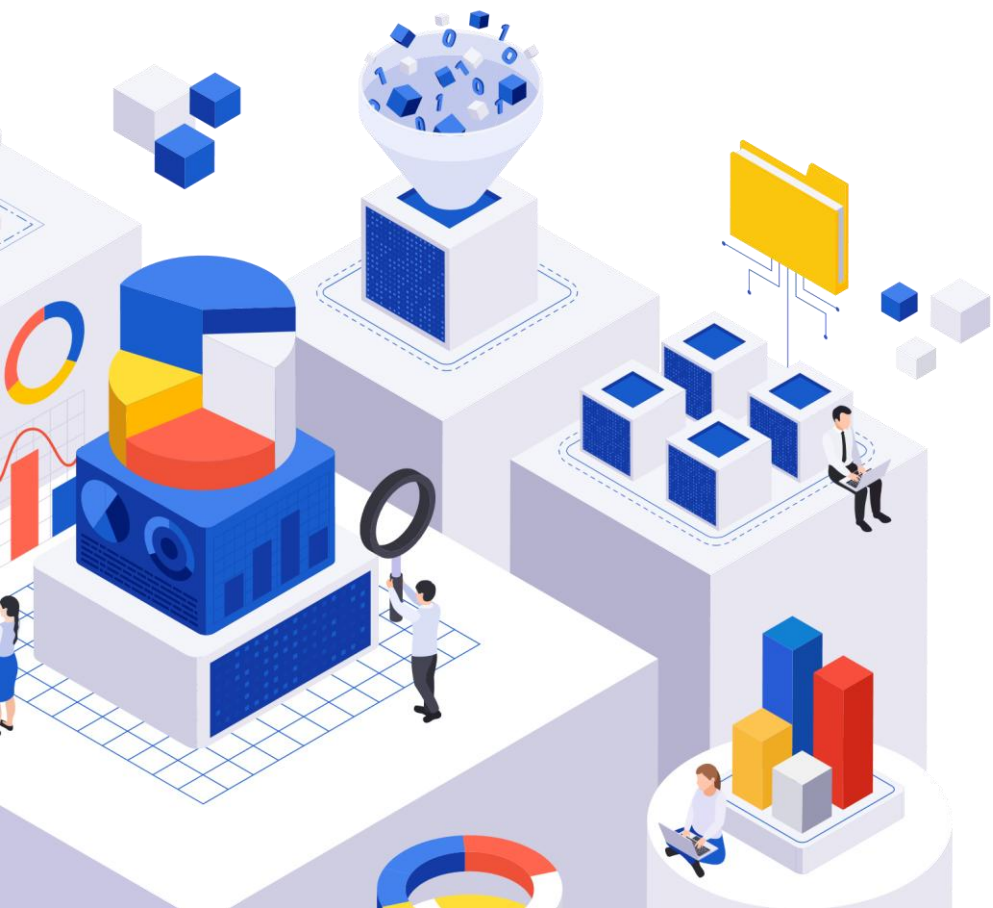


“제22대 국회 발의·입법 예고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안

415건 중 45%가 규정 강화 안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계 대상 신규 및 강화 규제”**

주: 최근 1년간 건설산업 주요 관련 법률 입법 동향 건수를 모두 합산 후 ‘기타’ 항목 제외



## 4

#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의 미래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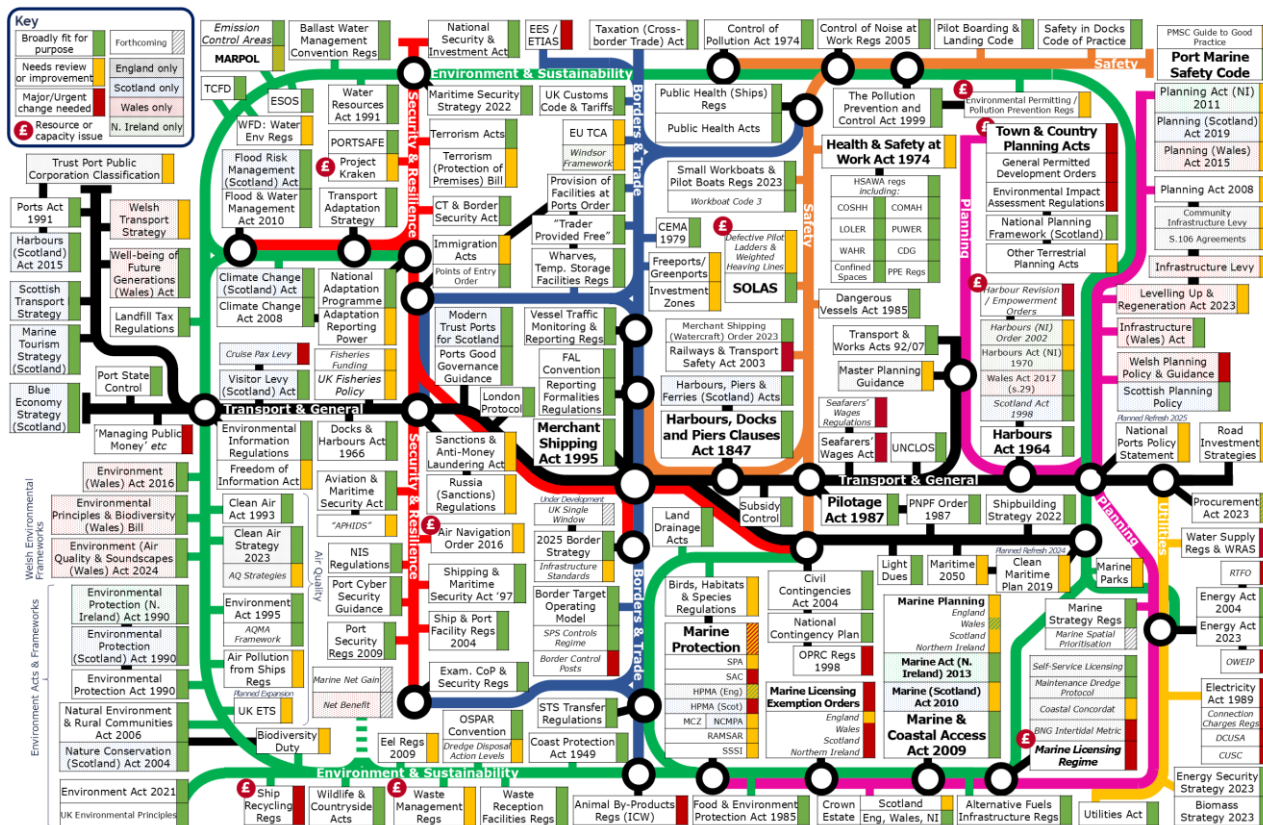
- ① 흩어진 규제, 일목요연한 정리로 규제합리화 시작
- ② 진짜! 피규제자 호소 창구 마련 & 활성화 유도
- ③ 국토교통부 규제관리 체계, 고도화가 곧 규제합리화의 촉매제
- ④ 규제총량 관리 체계 구축으로 규제합리화 전환점 마련

# 흩어진 규제, 일목요연한 정리로 규제합리화 시작



## ‘덩어리 규제맵’제작...시설물별 전(全) 과정 규제 시각화 추진

영국 항만 규제지도(Mapping Port Regulation) 사례(빨강, 노랑 규제의 경우 규제 개선 필요사항)



### [과제 ①] 규제 데이터베이스(DB) 표준화 및 통합 구축

- 부처·지자체별로 산재된 **규제 조문**과 절차 정보에 대한 **표준화 DB** 구축
- 시설물 유형·단계·부처·법령 별 **검색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

### [과제 ②] 민간·전문가 참여형 검증체계 마련

- 규제 맵 작성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현장성·정확성 강화**
- 실무 경험 기반으로 **절차 병목**과 **중복 규제** 발굴

### [과제 ③] 규제 간 상호연계성 분석

- 동일 시설물 적용 규제의 **중복·충돌 분석** 및 **규제조정 우선순위** 도출

### [과제 ④] 규제 맵 주기적 갱신체계 구축

- 법령조례 개정 시 **자동 업데이트** 또는 **연 1회 이상** 현황 재점검
- 변경 이력과 개선사항을 기록하여 **장기 추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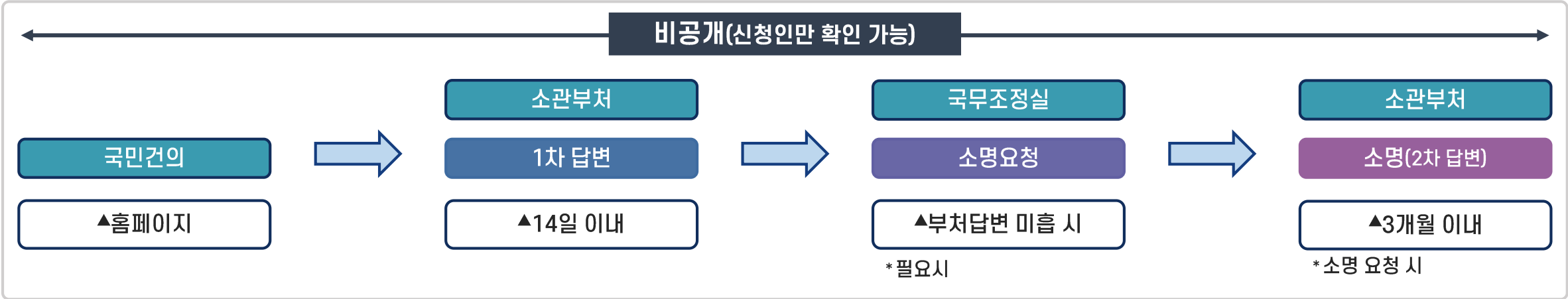
자료 : British Ports Association(2025.1)

# 진짜! 피규제자 호소 창구 마련 & 활성화 유도



## ○ 협·단체 중심 폐쇄형 개선에서...상시·공개 체계로 전환

### 현행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절차



자료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2025.3.31), “2024 규제개혁백서”

### 건의 개선 방향

#### [개선 ①]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 전(全) 과정의 투명한 공개

- 현행 규제개혁 신문고는 신청인(개인·기업)에 한해 신청 사항 및 처리 현황 등의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복 신고 방지**와 신청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투명한 공개 추진**

#### [개선 ②] 규제개혁 제안 채택 시 신청인(개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제안 유도를 위해, 규제 애로 해소에 기여한 제안의 **신청인(개인·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방안** 추진

\* (개인) “채택 제안의 공적을 고려하여 ‘영향도 등급(I~V)’에 따라 **10만~200만원 포상** 또는 **동등 가치의 비 금전 리워드** 지급(단, 동일·중복 제안 제외)

\* (기업) “기업이 제출·채택된 제안을 실증할 경우 **규제샌드박스 신속심사**를 우선적용하고, 필요시 **실증비·보험료 지원, 우대보증, 혁신제품 시범구매 연계** 등을 제공

# [참고] 건설산업 규제혁신 TF, 규제개선 의지 의문...



## 국토부, 수용 가능한 개선안에도 불수용...피규제자 목소리 막혀

### 「건설산업 규제혁신 TF」 추진과제 및 주요내용

< '21. 4. 6(화) 건설정책과 >

#### 1. 추진 현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에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대상 전면
-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이외에 **건설투자 환경 개선**과 **건설업자 부담완화**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규제개혁과제**를 발표
- 분야별 : 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업규제 개선과제(비대면 강화, 화에 따른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비용·절차) ③ 4차산업 도약
-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규제혁신 TF**」 구성(2.25)하고, 유관 단체(4개)로부터 **규제개혁 과제**(23건)를
- 규제개선 권의과제에 대해 소관부서 **자체검토(~4.1)**를 **TF위원 의견 청취**를 위해 「**건설산업 규제혁신 TF**」 회의

#### 2. 추진 절차

- 규제개선을 포함하여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발표('21. 6월)

규제 발굴 (~3월)	1차 심의 (~4월)	심층 심의 (~5월)	2차 심의 (~6월)
▶ 기업·협회 의견 수렴 (32건 발굴: 건설분과 23건, 기술분과 9건)	▶ 소관과 선별 검토 ▶ TF위원 의견청취 (연구기관, 유관 기관, 협회 등)	▶ 분야별 TF 심층심의 (건설산업, 기술정책 분과)	▶ 전체 TF 심층심의 (건설 분과)

### 건설산업 규제혁신 TF 건설산업 분과 1차 회의 계획 보고

'24.5.24(금), 건설정책과

#### □ 개최배경

- 「건설산업 규제혁신 TF」 구성('24.4.8) 후, 제출된 **규제개선 과제**의 내부검토 결과에 대하여 건설산업 분과 TF회의 개최 논의
- \* 국토부, 연구기관(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원 등), 유관민간기관(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 \*\* (건설산업 분과) 전체 40건 중 수용 6건, 수정수용 6건, 중장기검토 9건, 수용불가 10건

#### □ 회의개요

- 時 · 所 : '24. 5. 27.(월) 14:00~16:00 / 세종청사 6동 200호 회의실
- 참석자
  - 우리부 : 건설정책과장(주제), 담당사무관(건설정책과 등 소관과)
  - 기 관 : 개선과제 제안기관 및 건설산업 분과TF 소속 기관
  - \* 건설협, 전문건설협, 건설기계협, 기계설비건설협, 건설정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계설비산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공매협, 국토연구원
- 검토안건 : 규제개선 제안과제(40건, 건설산업 분과)

#### □ 진행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분 ■ 모두 말씀	과장님
14:05 ~ 14:10	5분 ■ 회의 개요 설명	담당자
14:10 ~ 16:25	105분 ■ 과제의의 (제안설명→토의→확정)	참석자
15:55 ~ 16:00	5분 ■ 마무리 말씀	과장님

#### □ 추진 일정

- '24.5~6월 : 규제개선 과제 심층논의 (개선안건 및 개선방향 확정)
- '24.7월초 : 규제혁신 방안 마련 후 총괄 TF를 통한 최종과제 확정
- '24.7월중 : 우리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 후 과제 이행

### [사례 ①] 민간표준도급계약서 개선 → 수용불가

-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시행**('20.11)에 따른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 대금지급보증은 건산법으로 이행 가능해, 민간공사 표준계약서 **포함 불필요**

### [사례 ②]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시 행정제재 완화 → 수용불가

-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완화(100/200/300만원 → 30/50/100만원)
- 건설공사대장이 **불법행위 확인의 핵심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수용 곤란

### [사례 ③]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활성화 지원 → 수용불가

- 민간공사 계약 시 분쟁해결방식을 사전에 명시(조정/중재)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본문'에 기명시되어 있으므로 '갑지'명시 필요성 낮음**

■  
■  
■  
■  
■  
■  
■

## 국토교통부 규제관리 체계, 고도화가 곧 규제합리화의 촉매제



## ○ 일몰심사 대상 공개·의견 수렴...처리 절차 온라인 전환

### ■ 일몰심사 대상 목록 공개 및 의견수렴 실시 방법 - (홈페이지 공개)

2022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 공개 및 의견수렴 실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현영 연락처 044-201-4818 등록일 2022-03-24 조회수 933

첨부파일 [HWP \(붙임1\) 2022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국토교통부\).hwp \(97Kbyte\) \[바로보기\]\(#\)](#)  
[HWP \(붙임2\) \(작성양식\) 2022년 일몰심사대상 규제개선 건의서.hwp \(33Kbyte\) \[바로보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제도에 대하여 규제 필요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개선, 일몰유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2022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붙임1)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2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에 포함된 법령 및 조문에 대하여 규제개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규제개선 건의서(붙임2)를 작성하여 메일(hyl1702@korea.kr)로 2022년 4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이현영 주무관, 044-201-48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활한 일몰심사 진행을 위해 2022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붙임1)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의 경우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되는 건의내용은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mple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기업의 국토교통분야 규제사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의견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개선(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양식 기재사항이 미흡하여 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사항은 반려처리 될 수 있으니,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을 양식에 따라 자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 접수 → 검토(대상여부)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결과회신(45일 이내)

### ■ 건의 개선 방향

#### [개선 ①] 일몰심사 대상 목록 공개 및 의견수렴·처리 절차의 온라인 전환 추진

- 규제 재검토 대상의 **전면 공개**와 온라인 상시 접수 체계 운영을 통한 **접근성 향상**, 규제 별 건의사항 공개를 통한 **유사건의 접수 최소화** 등 효과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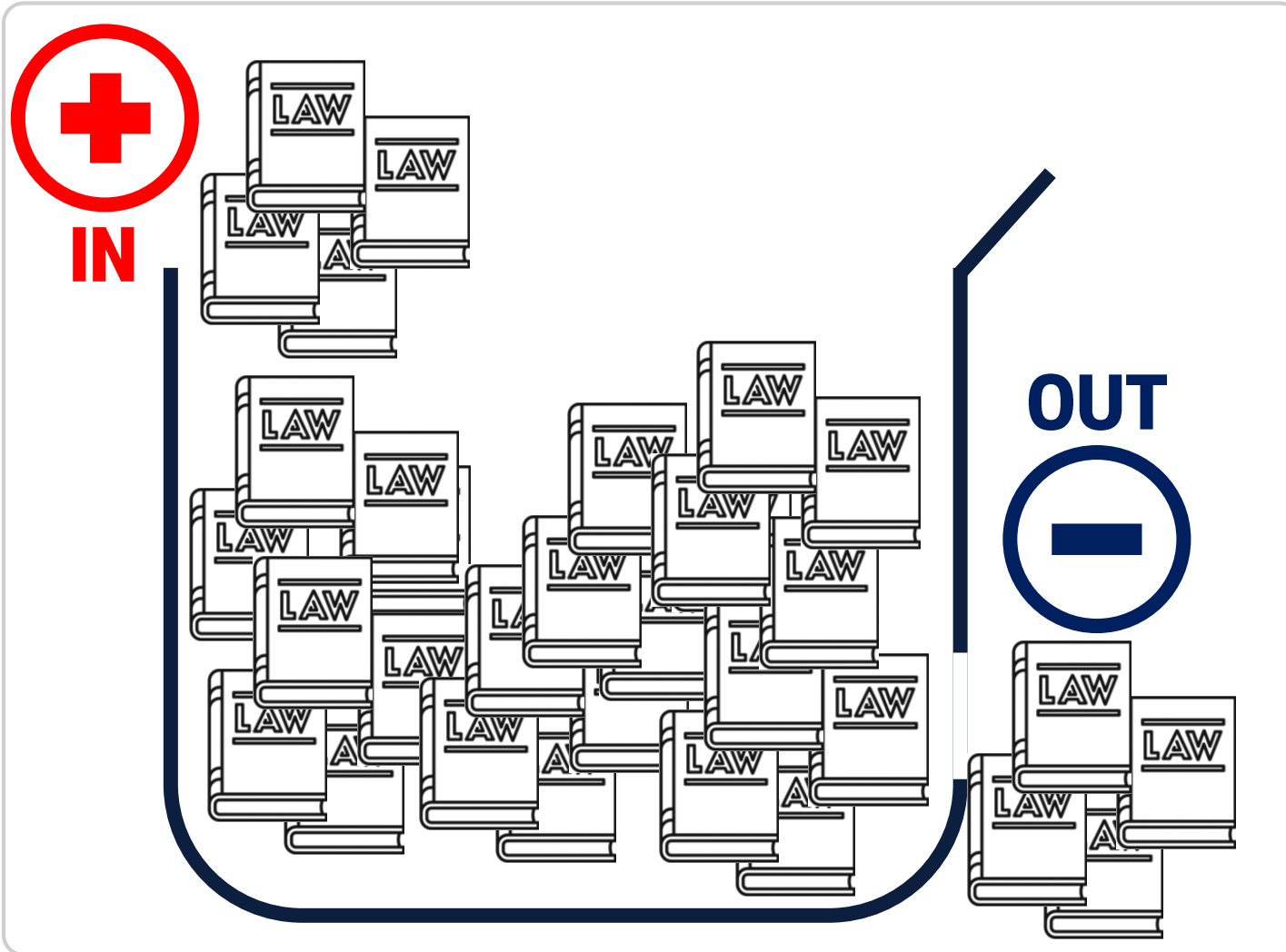
#### [개선 ②] 규제개선 제안 채택에 따른 신청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 활성화

-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제안**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제안**을 제출한 신청인에게 **인센티브 제공 방안** 추진

## 규제총량 관리 체계 구축으로 규제합리화 전환점 마련



### ○ 건설산업 규제 신설·강화 시, 기존 규제 폐지·완화로 총량 증가 억제



#### [과제 ①] 규제총량 관리 전담기구 설치

- 건설산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내 **규제총량 전담 팀** 운영
- 부처 간 조율 및 산업별 **규제현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연간 총량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도 관리

#### [과제 ②] 규제 영향평가와 연계

- 규제영향평가서에 **총량관리 평가 항목** 포함
- 총량 유지 여부를 **규제심사·개혁위원회**에 **심의에서 의무** 검토

#### [과제 ③] 부문별 규제 교환제(Trade-off) 제도

- 건설산업 세부 분야(안전, 환경, 품질, 인허가) 별로 규제를 **묶어 관리**
- 한 분야 **규제 강화** 시 동일 분야 또는 유사 영향 규제를 **우선 완화**

#### [과제 ④] 성과평가 및 피드백 제도

- 매년 **규제총량 변동**을 측정하고 성과를 **백서·보고서**로 발간
- 총량 유지 실패 시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합리화된 규제로 더 강한 건설산업을**

**- 부담은 덜고, 제도는 바로잡고, 경쟁력은 키운다**

김 화 랑, 부연구위원

hrkim@cerik.re.kr